

정성호 법무 “5·18 정신적 손배 위자료 형평성 맞춰야”

이달초 광주지법에 의견서 제출…국가 책임지고 배상 의지 표명
‘서울-광주 법원 위자료 편차’ 본보 지적 속 상향 조정될지 관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광주 법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도 서울법원과 광주법원 등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위자료 차이가 4배까지 벌어진다는 지적(광주일보 2024년 9월 30일 6면)에 따른 의견서다.

정부가 고액의 위자료를 산정해 왔던 서울 법원이 아니라, 적게 산정해 온 광주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자료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봄아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지만, 이번 의견서를 계

기로 위자료를 높이기 위한 추가 소송이 베발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5·18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9일 광주지법에 5·18 국가손배 사건 관련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5·18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신분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의견서에 “최근 5·18 유족회 성명, 국정감사 등을 통해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사이의 편차에 대한 문제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적시했다.

이어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의견서에는 사랑, 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예시도 포함했는데, 해당 예시에는 법원별 위자료 차이가 4배를 넘어 최대 6배까지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광주고법은 지난 2023년 8월 계엄군으로부터 곤봉, 전투화 등으로 구티당해 장해등급 14등급을 받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울지법의 경우, 같은 해 11월 똑같이 계엄군 폭행으로 장해등급 14등급을 받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산정해줬다. 같은 장해 등급을 받고도 A씨보다 6배 많은 위자료를 받은 것이다.

광주고법은 같은 해 11월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

구타 및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1990년 사망한 C씨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했으나, 서울지법은 같은 달 계엄군 총격으로 상해를 입고 구금된 뒤 정신질환을 앓다 도로에 뛰어들어 숨진 D씨에 대한 위자료를 4억원으로 산정했다.

정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5·18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산재해 있는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형평이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손해소송 판결들은 순례의 공평한 분단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5·18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의 정도와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대한 넓은 검토와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며 “5·18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서 내에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지만, 정부가 피고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간접적으로 위자료 상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18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지고 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정부가 위자료 상향을 전제로 의견서를 낸 것이 맞다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5·18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 무안군 고위공무원 4년 선고

관급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안군 고위 공무원이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4급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사이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금액은 8억여원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쟁기 것으로 피약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경우, 금품이 지방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 김 군수 등 총 10명이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군수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계약업체로부터 부정한 협탁을 받고 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단한 사회 일반의 시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불 조심기간 소방용품 점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9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생용동 산불감시 초소에서 산불소방차와 소방용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0대 여성 심리적 지배, 살해한 주범 무기징역

50대 여성은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9),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4시께 목포시 용해동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4개월여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관계인 D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수백만원 금품을 요구했으며, D씨 가돈을 보내주지 않자 B·C씨를 불러 폭행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D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뜯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 C씨에 대해서도 자신을 30대 미혼 무숙인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등 압박을 쳐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피약됐다. B씨 등은 A씨 지시를 받아 서로를 폭행하거나 A씨에게 본인 소유 땅을 팔아 자금을 대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A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피해자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 자녀나 형제에도 돈을 빌리게 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서구 공무원이 3000만원 넘는 구청 공금을 횡령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구는 회계관계 부서 직원인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변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자·변작,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서구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지방세 과·나납으로 환급 처리돼야 할 환급금 3284만 6550원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

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는 등 수법으로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제도상 지방세 과·나납 환급금을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약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 자신에 게 환급금이 돌아가도록 꾸몄다는 것이 서구 설명이다.

A씨는 연말 회계 정산을 하던 중 구청 계좌에 횡령한 금액을 되돌려 넣으려다, 입금이 되지 않

자 지난달 31일 상급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조치했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횡령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변상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관리·감독 책임자인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경정 계,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NH 농협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준)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둑 지 점 062)373-3235~6	운 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 립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상 춘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버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립점 062)511-2901~3